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0. 5.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 〈목 차〉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OECD 사무총장, ‘부패는 중남미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 1
- 기업의 부패 근절 노력에 대한 G20퍼레이션의 보고서가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이유 3
-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 전 최고경영자, 스페인 경찰에 체포 ... 8
- 에어버스 반부패 합의의 교훈 ..... 11
-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부패 단속에서 공무원 300여명 체포 ... 18
- 부패와 코로나바이러스 ..... 20

### II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28
- 제3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ACTWG) ..... 29

### III 옴부즈만 소식

- 노르웨이 : 한나 할렘, 사상 첫 여성 의회 옴부즈만 ..... 30
- 호주: 옴부즈만 조사 결과 지방의회 세 곳이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차위반 벌금 수천 건 환급 ..... 31
- 영국: 지방의회에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통정책 촉구 34
- 국제: 코로나19 누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가 ..... 36
- 핀란드 : 소비자 옴부즈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 광고에 경고 ... 38

##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OECD 사무총장, '부패는 중남미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CNBC, 2020.1.21)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전략적 전망: 중남미' 세션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부패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패는 암과 같다고 말했다.

-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중남미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중남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화요일 열린 세계경제포럼 회의 '전략적 전망: 중남미'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부패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패는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 지역 주민 중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뒷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한 세금을 내가 왜 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 '우리는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 구리아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중남미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사회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불평등의 심화, 고용 안정 우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 1990년대와 2000대에 걸쳐 중남미 지역에서 연이어 정권을 잡은 좌파 정부들이 지난 10년간 힘을 잃으면서 최근 수년간은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하게 되었다.

-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 사임을 거부하면서 시위가 촉발되었고, 칠레에서는 급격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연금 개혁과 연금액 삭감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에콰도르에서는 수일간 벌어진 격한 시위 끝에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이 값비싼 연료의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해야만 했다.
- 세계은행은 지난해 말 ‘몇몇 장애물’로 인하여 중남미 지역이 ‘열악한 경제 성과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 세계은행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 대국 모두가 향후 수개월 간 경기 침체, 거시경제의 격변과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울로 구에데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장관은 토론회 중 ‘미국에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브라질에서는 허용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로 인해 부패가 확산 된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acing Latin America, OECD chief says (2020.1.21, CNBC)

**기업의 부패 근절 노력에 대한 굿코퍼레이션의 보고서가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이유**

(Ethical Corporation Magazine, 2020.1.23)

*굿코퍼레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 스스로 부패 리스크를 확인·평가하고, 기업 경영진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기업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굿코퍼레이션(GoodCorporation) 개릿 토마스(Gareth Thomas)는 제3자와 중개인 사이의 뇌물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실사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뇌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돈세탁, 사기, 계약 수주를 위한 뇌물, 기타 다른 형태의 유인책 등으로 발생하는 부패 사건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세계적으로 연간 2조 6천억 달러(약 3,18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은행은 기업과 개인이 해마다 뇌물로 제공하는 돈의 액수가 1조 달러(약 1,2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기업들의 충실한 반부패 절차 이행을 통해 뇌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각국 검찰도 부패 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서로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 핵심은 충분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정 뇌물 리스크를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모든 기업은 부패에 취약하다**

- 굿코퍼레이션은 지난 10년 이상 ‘뇌물 및 부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각국의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그들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평가·측정하고 자문을 제공해왔다. 굿코퍼레이션의 최근 보고서 ‘부패 척결: 여전한 기업 리스크’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2014년 발간된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적절성이 62%에서 70%로 상승) 반부패 위험 평가 및 실사 등의 영역에서는 주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굿코퍼레이션이 평가한 7천개의 반부패 위험 평가 절차 중 40%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9년의 5년 동안 적절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선 부족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 자신이 어떠한 특정 뇌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모든 기업은 부패에 취약하며, 방어선으로서의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
- 영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 프랑스 반부패기구 등 사법당국들은 효과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자신이 얼마나 부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리스크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을 평가할 때 각 기업이 자신의 반뇌물 및 반부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각 기업이 자신의 규모와 조직구조, 위치 및 활동 특성에 적합한 예방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진의 시간과 재원을 불필요한 데 빼앗기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필요한 데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굿코퍼레이션의 자료에서 하위 25%에 속해있는 기업 중 4분의 3 이상이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위 25% 기업 중 83%는 자신의 반뇌물·반부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문제로는 리스크 평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거나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상위 기업들은 정기적 모니터링과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상위 25% 기업 중 94%는 적절한 반뇌물·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있었고, 89%는 정기적으로 반뇌물·반부패 예방 정책을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반뇌물·반부패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나 포괄적인 경우 리스크 평가의 효과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상세한 리스크 평가는 부패 리스크의 세부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러한 상세 핵심 영역에는 중개인을 통한 판매나, 면허 및 허가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뇌물 제공 요구가 흔하게 벌어지는 산업부문과 국가에서의 영업 등이 포함된다.
- 기타 리스크에는 투명한 지급 절차 미흡, 판매 성과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판매 인센티브, 판매 유인책 지급을 조장하는 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 리스크에 근거한 뇌물 방지 정책은 반뇌물·반부패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적절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반뇌물·반부패 실사에도 도움을 준다.
- 실사 부분은 반부패 정책 중 가장 취약한 영역인데, 굿코퍼레이션이 평가한 실사 절차의 53%가 부적정 등급을 받았다. 2014년 63%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는 영역이다.
- 롤스로이스와 밴티지 드릴링, 페트로팍의 기소 사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기업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3자 또는 중개자를 통한 거래 분야에서

더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기업들은 실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는 실사의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

- 시행된 리스크 평가의 절반 이상이 제3자에 대한 실사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분명한 절차가 없고, 평가의 3분의 2는 대리인, 중개인, 공급사, 유통사 등의 관행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뇌물 방지 의지가 강력한 반부패 절차를 만드는 데 핵심이다.’**

- 반부패 실사라는 어려운 영역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굿코퍼레이션의 반부패 척도에서 상위 25%의 기업들조차도 실사의 일부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 이상은 제3자나 공급사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이들 중 89%는 공급사의 윤리적 관행을 검토하거나 언제 실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제3자와 공급사 전체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면 실사는 더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뿐이다. 최선의 전략은 제3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리스크 기반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사를 진행할 때 반뇌물·반부패 실사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 역시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반뇌물·반부패 리스크 평가와 실사 등 우리가 해 왔던 모든 일의 결과를 보면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 경영진의 의지가 강력한 반부패 절차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무부가 언급했듯 ‘조직 최고관리자들은 뇌물이 용인되지 않는 청렴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 우리의 연구 결과에도 이러한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반부패 척도 의 상위 25%의 기업들은 뇌물방지에 있어 경영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위 25% 중 72%의 기업들은 고위층의 의지가 부족했으며, 심각한 부패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유착이 부패 요인인 경우도 있었다. 부패 척결을 원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반뇌물·반부패를 옹호하는 최고경영진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다.
- 뇌물과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은 최근 검찰과 규제 당국이 반부패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관련된 직원 역시 기소될 수 있다. 이제 기업과 임직원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반뇌물·반부패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 굿코퍼레이션의 반뇌물·반부패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철저하게 확립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 기관들과 검찰 모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반뇌물·반부패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갈팡질팡 하는 기업들은 그 결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 원문기사 : ‘Why our report on business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should ring alarm bells’ (2020.1.23., Ethical Corporation Magazine )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 전 최고경영자 스페인 경찰에 체포** (REUTERS, 2020.2.13)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전 CEO 에밀리오 로소야(Emilio Lozoya)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스페인에서 체포되었다.

-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전 최고경영자 에밀리오 로소야(Emilio Lozoya)가 지난 수요일 스페인 경찰에 체포되면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행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에 있어 뚜렷한 첫 성과가 나타났다.
- 2019년 중반부터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로소야는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SA가 연루된 광범위한 뇌물수수와 돈세탁 관련 부패 혐의로 멕시코에서 기소되었고, 로소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 반뇌물 기조를 내세우며 당선된 좌파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8년 12월 취임 이후 전 정권 관련 공직자들을 부패한 고위층으로 이미지를 부여해 왔는데, 이번 로소야의 체포로 마침내 반부패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게 됐다.
- 지난해 멕시코에서 기소된 로소야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페멕스’라고 불리는 멕시코 석유기업 페트롤레오스 멕시코노스(Petroleos Mexicanos)의 경영을 맡았다.
- 경찰에 따르면 로소야는 스페인 말라가시(市)에서 체포되었다.
- 로소야의 변호인 하비에르 코엘료(Javier Coello)는 로소야가 스페인에서 강제추방에 대항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멕시코로 돌아갈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코엘료는 멕시코 방송사 밀레니오(Milenio)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는

로소야가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며, 로소야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강력한 반부패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오브라도르 정권이 멕시코의 역대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입증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수많은 스캔들이 불거졌던 페냐 니에토(Pena Nieto) 전 대통령 행정부의 전임 장관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공식 기소를 추진했을 뿐이다.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달간 페냐 니에토의 측근이자 전 최고국가 정보담당관이었던 게나로 가르시아 루나(Genaro Garcia Luna)를 포함하여 멕시코의 전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 멕시코 공공행정부의 이르마 산도발(Irma Sandoval)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법무장관에게 로소야의 체포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로소야가 '최악의 구조적 부패의 대표이자 운영자'라고 비판했다.
- 코엘료는 멕시코 법무장관이 오데브레시 사건뿐만 아니라 로소야의 공직 임명 전 멕시코 최대의 철강회사인 알토스 호르노스 데 멕시코 (Altos Hornos de Mexico, AHMSA)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하여 로소야의 체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로소야에 대한 조사 중 일부는 오데브레시가 뇌물 제공을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령회사로 AHMSA가 이체한 자금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의 유령회사는 그 대가로 문제의 돈을 로소야와 그 친척들에게 보냈다는 정황이 있다.
- 로소야는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의 2011년 대선 선거운동 캠프 관리자였다.
- 로소야가 페멕스의 최고경영자로 있는 동안 페멕스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비료공장 두 곳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는데, 멕시코 연방감사원(ASF)에 따르면 이로 인해 회사는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페멕스는 470억 달러(약 57조 9천억 원) 상당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석유회사가 되었다. 2018년 니에토 대통령의 퇴임 시 부채는 무려 1천 60억 달러(130조 7천억 원)에 이르렀다.
- 지난 7월에는 로소야의 모친이 돈세탁 혐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체포되었다.
- 독일인인 로소야의 부인 마리엘 에케스(Marielle Eckes) 역시 로소야의 여동생 길다 로소야(Gilda Lozoya)와 함께 미집행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 원문기사 : Spanish police arrest former head of Mexico's state oil firm Pemex (2020.2.13, REUTERS)

**에어버스 반부패 합의의 교훈** (LEXOLOGY, 2020.2.26)

에어버스는 전 세계 다수 항공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금액인 40억 달러(약 4조 9천억 원)를 지급하기로 프랑스, 영국, 미국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핵심사건**

- ▶ 에어버스S.E.(에어버스)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당국이 전 세계 다수 항공사에 대하여 수년간 조사를 지속해 온 결과 부패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40억 달러(약 4조 9천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 ▶ 최근 기체, 엔진, 부품 제조사를 비롯하여 항공사와 정비업체 등을 포함한 항공 산업 전반에 다수의 부패 관련 주요 사건들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에어버스가 이목을 끌고 있다.
  - ▶ 에어버스를 포함한 항공업계 전반에서 불거진 최근의 부패 사건들은 각 기업의 준법감시인들이 시급히 반부패 정책의 원칙뿐만 아니라 그 실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에어버스는 부패 관련 범위반 혐의의 합의를 위해 40억 달러(약 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 2020년 1월 말 프랑스 경제전담검찰청(PNF), 영국 중대비리수사국(SFO), 미국 법무부, 미국 국무부와 합의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 합의 금액으로 문제의 부패 행위에는 항공사와 여러 국가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 에어버스의 대리인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Holland & Knight)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합의 자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항공업계 기업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실질적 교훈이나 사내·외 부패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준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미흡한 준법문화는 치명적 결함

- 에어버스는 문서상으로는 탄탄한 준법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는 특수마케팅조직(SMO)를 신설하여 컨설턴트 선정과 감시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 중개인들과 에어버스 고객사들 사이에 상호 독립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수마케팅조직에는 자체 준법감시인과 법무 자문위원이 있었고 에어버스는 그룹 차원에서 컨설팅 계약을 승인하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의심스러운 컨설팅 계약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컨설팅 계약 승인 건(또는 지불 계획)에 명백히 부패 위험이 드러나 있음에도 승인된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는 준법부서에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계약 건도 있었다. 미 법무부는 에어버스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지급 건들을 숨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 고객에게 입금하기 위해 에어버스와 직접 관련 없는 은행 계좌 이용
  - ▶ 실제 제공된 적 없는 서비스의 허위 계약서 작성
  - ▶ 허위 컨설턴트 활동 보고서 작성
  - ▶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건네기 위한 방법으로 변제 불가능한 허위 대출 이용
- ‘준법 문화’ 또는 ‘윗선의 분위기’ 같은 단어가 사용된 합의서가 언뜻 수준 높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반복적 행위를 암묵적으로 눈감아 주거나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법 상황 검토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승인 절차를 무시한 한 기업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 컨설턴트, 중개인, 대리인은 여전히 부패의 가장 약한 고리

- 에어버스에 대해 제기된 상당수 의혹은 에어버스 고객사의 임원이나

그 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개인, 컨설턴트, 대리인 등의 제3자에게 지급된 ‘커미션’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 중 많은 경우 부패의 위험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예를 들어 항공 산업과 관련된 경력이 거의 없는 제3국 소재의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이 회사는 항공사 고위 임원 부인의 소유였다.

- 에어버스가 연루된 많은 부패 사안들이 중개인,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 등과 관련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에어버스가 자사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제3자에 대한 심사와 그러한 당사자에 대한 계약이나 커미션 지급 승인에 분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기타 거래상대방들이 부패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을 철저히 조사 중**

- (익명의 리스사의 관여 하에) 스리랑카 항공사가 에어버스에 주문한 항공기를 매각한 후 수출신용기관이 차용 거래에 대한 실사 도중 제기한 의혹으로 에어버스가 영국 중대비리수사국에 최초 신고 (자발적 공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출신용기관은 문제의 항공기 구입 건과 연관된 모든 대리인과 컨설턴트의 공개를 요구했다. 수출신용기관은 제3국에 위치한 항공 산업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컨설턴트가 계약을 수주했다는 데 의혹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브루나이 컨설팅 회사가 스리랑카 항공사 고위 임원의 부인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어버스는 사실상 이 컨설턴트에게 1,600만 달러(약 197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에어버스의 준법 담당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항공사 임원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된 돈과 관련된 사안에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도의 은행이 문제의 인도 항공사 임원 부인이 소유한 버뮤다 소재 회사로 계속해서 지급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 이는 은행과 임대사, 투자자와 기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주요 항공기 거래 건과 관련된 중개인이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컨설턴트에게 의문스러운 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기관이 문제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의 경우 ‘의심활동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s, SARs)’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유럽연합 기관의 경우에는 EU 돈세탁 방지 지침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사법당국, ‘상업적 이윤 목적’ 뇌물 수수에 대한 기소 강화**

- 영국 중대비리수사국이 담당했던 지난 몇몇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에어버스 사건은 이제 당국이 굳이 외국 공무원이나 외국 정부기관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적 이윤 목적’의 뇌물수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영국 중대비리수사국이 제출한 기소장의 주요 기소조항 중 일부는 영국 뇌물수수법의 ‘영리목적 뇌물’ 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 조항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에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미 법무부는 여행법 등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 행위 역시 기소할 수 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외국 정부 소유의 국영 항공사 임직원을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후원 및 기타 마케팅 관련 대금 지급도 ‘뇌물죄’ 구성 가능**

- 사법당국은 에어버스 임직원들이 부패행위에 적용했던 여러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 예를 들면, 에어버스는 말레이시아 항공사 임원 2명이 소유한 카레이싱 팀에 총 5,000만 달러(약 616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경주용 자동차 위에 에어버스라는 이름이 달리긴 했지만, 영국 중대비리수사국의 조사 결과 이러한 후원이 말레이시아 항공사 임원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승인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에어버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고액 후원 계약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공 업체들이 마케팅과 시장 진출의 수단으로서 스포츠 팀을 후원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후원하고자 하는 팀과 그 소유주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나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에어버스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기소조항 중 하나는 중국 국영 고객사와의 공동기금에 관한 에어버스사의 지급 건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문제의 기금은 명목상으로는 조종 교육시설 및 항공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기금 일부분은 사교행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고객사 임원이 거래상대방의 임원이 지지하는 자선단체에 상당 금액의 기부를 요청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와 비슷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프랑스 경제전담검찰청과의 합의서에는 에어버스사의 임원이 1) 회사가 항공사 임원 소유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2) 호화 부동산을 매입하여 외국 항공사 임원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숨기기 위한 몇몇 계획을 제안했으나 회사 내부 검토위원회에서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 항공사 임원과 이해관계 있는 아프리카 광산 영업에 투자하는 등의 복잡한 방식으로 위장된 부패행위는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세미나 후원에 대한 주의 깊은 심사 필요**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기소조항 중 하나는 에어버스가 국영 항공사 등을 포함하여 다수 항공사 임원을 호화 리조트에 초청하여 개최한 세미나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와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의 발표와 개별 고객사와의

사이드미팅만이 일정으로 잡혀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레저 활동이나 유흥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교육행사 후원은 사업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법한 수단일 수 있지만, 준법감시인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혜택 받는 손님들은 각국의 국내법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적절한 승인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에어버스 사건의 잠재적 여파는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않을지도

- 이번 조사로 인해 에어버스사는 100명 이상의 임직원을 해고하고 경영진을 변화시켰으며, 제3자 컨설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에어버스 사건 합의에 언급된 항공사들과 그 임원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합의 건과 관련된 항공사 임원 일부는 직무 정지되었고, 각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문제의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와 항공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법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문제의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인도 이전 상태인 항공기 주문 건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경우 고객사들은 문제의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 이번 사건을 비추어 볼 때 항공업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번 벌금 규모와 사건 여파는 항공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문서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부패 정책과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미국 사법당국은 탄탄한 준법 프로그램의 보유가 해외 반부패법 사건에서 주요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지만, 영국 뇌물수수법 하에서 이러한 ‘충분한 조치’는 적극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준법감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 항공업계에 존재하는 특정 부패 리스크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을 교육하고 브리핑할 때 이번 사건과 다른 항공업계 관련 사건들을 활용
- ▶ 외부 제3자 컨설턴트와 컨설팅 계약의 건전성 심사 및 적절한 절차의 이행 감시
- ▶ 이번 합의 건과 관련된 주체와 과거에 거래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이러한 당사자와의 거래에 있어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부 검토 실시

※ 원문기사 : Lessons Learned from the Airbus Anti-Corruption Settlements (2020.2.26., LEXOLOGY)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부패 단속에서 공무원 300여명 체포**

(FINANCIAL TIMES, 2020.3.16)

사우디 반부패기구 나자하(Nazaha)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군 장교를 포함한 298명을 뇌물, 횡령, 예산 낭비 등의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대적인 부패 단속으로 군 장교를 포함하여 3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체포되었다.
-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기구인 나자하(Nazaha)는 이번 단속으로 674명이 조사를 받았고, 총 1억 1백만 달러(약 1,245억 원) 규모의 뇌물, 횡령, 공공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하여 298명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사우디 정부는 국가와 관련된 뇌물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해왔다. 2017년 11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이끈 이례적인 반부패 단속으로 300명 이상의 왕자와 재벌들이 리야드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되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젊은 왕세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졌다. 구금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산이나 현금을 국고에 헌납한 후 풀려났다.
- 사우디 정부는 이번 단속으로 1천억 달러(약 123조 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억만장자 투자자인 알 왈리드 빈 탈랄(Alwaleed bin Talal) 왕자나 유력 상인의 가족 등 주요 재계 인사 일부가 체포되면서 사우디의 비즈니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 살만 국왕의 형제인 아메드 빈 압둘아지즈(Ahmed bin Abdulaziz) 왕자와 전 왕세자이자 내무부장관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Mohammed bin Nayef) 왕자를 포함하여 최소 두 명 이상의 왕자가 이번 달 체포되었다. 이 두 왕자는 무함마드 왕자의 잠재적 정적으로 여겨지는 인물로, 이들의 체포는 다른 왕족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충도 용인하지 않겠

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 그 이후 최근 반부패 단속은 군 장교와 법관 등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육군 소장 한 명을 포함한 국방부 관료 8명과 육군 소장 한 명, 육군 준장 한 명, 판사 2명, 보건·교육부 관료를 포함한 내무부 관료 15명 등이 혐의를 받고 있다.
- 정확히 언제 조사와 체포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 무함마드 왕자는 정치적 비호와 연줄정치가 만연한 사우디에서 본격적으로 반부패 행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2017년의 숙청 이후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무함마드 왕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사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석유 의존적 경제를 개혁하고 보수적인 국가 분위기를 현대화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또한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종교경찰을 통제 하면서 여성의 운전 금지법을 폐지하고, 영화관 개관이나 콘서트 개최 등을 허용하는 등 사회적 제약을 완화해 왔다.
- 그러나 무함마드 왕자의 반부패 개혁에는 왕족과 재계, 학계 인사, 시민 활동가, 블로거, 언론인을 표적으로 한 단속이 다수 수반되기도 했다. 2018년 10월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우디 요원들이 유력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사건 이후 수년간 사상 최대의 외교적 위기를 겪으면서 무함마드 왕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 사우디 정부는 카슈끄지의 피살은 요원들의 독단적 작전이었다고 일축했다.

※ 원문기사: Saudi Arabia arrests nearly 300 public servants in latest crackdown (2020.3.16, FINANCIAL TIMES)

**부패와 코로나바이러스 (TI, 2020.4.3)**

국제투명성기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중에 권력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코로나19라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맞춰져야 한다.
-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질병 발생 상황은 우리의 보건 시스템 내에 존재해 온 균열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데,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위태롭게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와 기회 역시 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평상시에도 보건 부문의 부패는 해마다 5천억 달러(약 616조 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다.

**보건 시스템 붕괴 직전**

- 전 세계적으로 164개국 이상이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8천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숫자는 매일 급증하고 있다.
-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 취약한 국가 보건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 다수 국가들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사와 치료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다.

## 부패 리스크

- 안타깝게도 특히 부패는 제도와 감독이 약화되고 대중의 신뢰가 저해되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더 만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에볼라 바이러스나 돼지독감과 같은 이전의 세계적 보건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펴보면,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부패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가능성을 사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약품과 의료장비 조달

- 보건 시스템에서 의약품과 의료물자 조달은 일반적으로 가장 부패에 취약한 영역 중 하나이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물자 보급에 투입되는 총 금액의 대략 10~25%는 부패로 인한 손실로 사라지고 있다. 특히 EU지역의 의료 분야 부패 사건 중 28%는 의료장비 보급과 관련되어 있다.
- 이 모두는 위기가 아닌 평상시의 통계수치이다.

## 가격 부풀리기 방지

-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약품과 의료물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취약한 보급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각국 정부가 의료품 보급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갈취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개방적이고 투명한 계약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 부당행위의 여지가 없게 되면 가격 부풀리기를 할 수 없고, 업체들은 각국 정부에 합리적인 가격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같은 물품의 사재기 역시 의료물품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사람들의 공포에 편승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부풀려진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
- 인도에서는 국민들이 권장 소매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 아마존은 가격을 부풀린 물품이나 바이러스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허위 매물 등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비윤리적인 부당 이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민간부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이익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아야 한다.

###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 공유

-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인도, 기타 국가의 제약회사들 역시 항생제와 기타 의약품의 주요 원재료 등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생산 규모를 줄이고 있다.
- 이처럼 주요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국 식약처(FDA) 등 정부 기관들은 부족 의약품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소비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어떤 약품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보건 당국들은 대체 제약사를 찾는 등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수밖에 없다.
- 지금과 같은 위기에 각국 정부는 기업의 이익 보호에 치중하기보다는

환자들의 목숨이 달린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품 부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자금지원

- 세계 각국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를 늘려왔다.
-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미국은 사스나 메르스 등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연구에 약 7억 달러(약 8,634억 원)을 지원해 왔다. 최근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에 2천만 파운드(약 299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EU는 관련 예산을 4천7백5십만 유로(약 633억 원)로 증액했다.
- 각국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도 긴급 대응을 위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지금처럼 많은 돈이 국고에서 흘러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돈이 부패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추적과 감시가 필요하다.

### 임상시험 데이터 투명성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발표 역시 중요하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미 없는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효과가 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실험 결과의 공개도 중요하다.
- 그러나 특히 EU 지역에서 공공재원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포함한 연구들의 현재 임상시험 결과 발표율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진 임상시험 결과 발표율은 약간 더 나은 수준이지만,

많은 보고서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수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 미국의학연구소(IOM)의 2009년 보고서는 의학 연구, 교육, 의료행위 전반에 존재하는 민간부문의 영향력으로 인한 만연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다른 민간 연구 결과들은 임상시험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연구 데이터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에 대한 민간 업계가 가지는 영향력이 중요한 연구 결과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많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민간 기업이나 각국 정부 사이의 비밀 경쟁이 아닌 투명하고 협력적인 노력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이번주 초 다수 언론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미국과 독일 사이의 대결을 보도했는데, 이러한 경쟁은 정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위기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른 국가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

### 돼지독감의 교훈

- ‘영국의학저널’(BMJ)에 따르면 2009년~2010년 돼지독감이 발생하면서 돼지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비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180억 달러(약 22조 원)를 지출했다.
- 그러나 4년간의 노력 끝에 스위스 제약회사 로세(Roche)로부터 얻게 된 정보를 포함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과학자들은 타미플루의 돼지독감 치료 효과가 타이레놀 성분보다 크게 나은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전반적인 오정보 확산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와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현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데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 중국 우한에서는 의료전문가인 리원량이 팬데믹의 심각성에 대하여 조기 경보를 울리려다가 정부 관료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 미국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같은 최고 보건 전문가 사이에 코로나19 정보와 관련하여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병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고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WHO는 이러한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부른다.
-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개방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뇌물 리스크

- 병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고군분투 중이며, 의료진, 침상, 인공호흡기, 기타 장비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의료진은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환자들 중 먼저 치료해야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뇌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2019년 아프리카·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부패 바로미터(MENA)에 따르면 병원 및 보건센터에서 발생하는 뇌물 수수 비율이 각각 1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비율은 10% 선이었다.

-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 뇌물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환자들은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자와 뇌물을 낼 돈이 없는 환자들을 대기 명단의 가장 아랫줄로 밀어내게 된다.

### 에볼라의 교훈

- 2014~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봉쇄 지연을 통하여 위기 시 부패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국제 적십자사는 기니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발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 비용이 6백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볼라 확산으로 인하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부실관리, 잘못된 급여 기록과 물품 대금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치료를 받거나 봉쇄지역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의료진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일도 발생했다.

### 사스의 교훈

- 2003년 사스 발생 이후 대만은 향후 비상상황에서 협력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휘본부를 설립했다. 투명성 강화, 신기술 확보, 강력한 예방계획을 통하여 대만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 대응에 있어 더 나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아시아 지역의 사스 발생 이후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보건 인프라가 개선되었다.

### 나아갈 길

-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패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우리의 보건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의약품과 백신 조달 과정을 개선하고, 계약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며, 약품과 의료물품의 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중요 의약품 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각국 정부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과학자들이 매번 그랬듯이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지 않고,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병원과 의료 센터에서의 뇌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공익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 또는 기업 이익이 아닌 공중 보건의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and the Coronavirus (2020.4.3, Transparency International)

## 2 국제회의 동향

### 1 2020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 2. 3.(월)~6.(목)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Crowne Plaza Riyadh RDC 컨벤션 센터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사우디, 이탈리아)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싱가포르, UAE 등 참관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Interpol, IMF 등 국제기구 대표

#### 2. 주요 결과

- 2020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2020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청렴성 제고 관련 고위급 원칙’, ‘민영화와 민관 협력 파트너십(PPP) 청렴도 제고 관련 고위급 원칙’, ‘국가적 반부패 전략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중점으로 논의
- 전임 의장국인 일본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은 5-6월까지 관련 내용을 수집하도록 합의
- 그간의 이행점검 보고서 형식을 개선하여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초안은 2차 실무그룹회의 시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하기로 함
- 이번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는 C20과 더불어 지난번 회의 시 참석하지 않았던 B20과 함께, 최초로 W20(Women 20)이 참석하여 별도 발표 세션을 가짐

## ② 제3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ACTWG)

###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13.(목)~14(금)/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 참석자 : APEC 회원국(16개국), UNODC, 인터폴 관계자 등 40여명
  -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참여
  - ※ 중국, 칠레 화상 참여, 21개 APEC 회원국 중 일본, 페루, 멕시코, 피푸아뉴기니, 대만 불참

### 2. 주요 논의내용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10개 회원국(한국, 미국, 중국,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발표
  - ※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 한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상황 △ 제19차 세계반부패회의(IACC) 개최 등 부패방지 노력 소개
- '20년 ACTWG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 2019-2022 전략 계획 및 '20년 APEC 우선순위, APEC 산하 회의체들과의 협업 추구의 기초 하에 활동 계획 수립
  - 반부패에 있어 성 문제의 이슈화에 따라, 향후 회원국은 자국의 반부패에 있어 성 주류화 노력을 공유하기로 함
    - \* Gender Mainstreaming : 여성들과 남성들이 사회의 자원, 기회와 보상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모든 노력
-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 UNODC 아·태지역 전문가 참석을 통해 역내 반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고 감찰기관 및 반부패 기구들의 상호 협력성 증진 등 다양한 반부패 이행 방향 제안

### 3 옴부즈만 소식

**노르웨이 : 한나 할렘, 사상 첫 여성 의회 옴부즈만** (IOI, 2020.2.11)  
 한나 헬렘 신임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은 노르웨이 역사상 첫 여성 의회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어 2020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한나 할렘(Hanne Harlem) 신임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이 2월 1일 첫 임기를 시작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19년 10월 할렘 옴부즈만을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



#### 노르웨이 사상 첫 여성 의회 옴부즈만

- 한나 할렘 신임 옴부즈만은 1962년 12월 안드레아스 샤이(Andreas Schei) 대법관이 초대 의회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이후 여섯 번째의 의회 옴부즈만이 되었다. 또한 할렘 신임 옴부즈만은 노르웨이 역사상 첫 여성 의회 옴부즈만이다.
- 한나 할렘 신임 옴부즈만은 ‘의회가 보내주신 신임에 감사드리며,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부당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할렘 신임 옴부즈만은 오슬로시 대표 법무관 출신으로 그 이전에는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 노르웨이 금융감독원 법률자문을 역임했다. 정치 입문 후에는 오슬로시청에 몸담기도 했고 아동가족부의 정치자문, 오슬로시청 아동·교육위원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 한나 할렘 신임 옴부즈만은 오계 토르 팔칸에(Aage Thor Falkanger) 옴부즈만의 후임으로, 팔칸에 전임 옴부즈만은 2020년 1월 1일자로 노르웨이 대법원의 대법관직으로 복귀했다.

※ 출처: IOI “Hanne Harlem, the first female Norwegian Parliamentary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020.2.11.)

**호주: 옴부즈만 조사 결과 지방의회 세 곳이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차위반 벌금 수천 건 환급 (IOI, 2020.2.25)**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 여부는 지방의회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세 곳의 지방의회가 그 검토를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 법을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 데보라 글라스(Deborah Glass)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지방의회 세 곳이 주차위반 벌금부과 검토를 외주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임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글렌 에이라, 포트 필립, 스톨링턴 지방의회가 주차위반 벌금부과 여부 검토를 민간 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2006년에 도입된 법에 근거하여 주차 위반 범칙금 부과 여부는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의회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 지난해 모나쉬와 킹스턴 지역의회는 범칙금 검토 외주위탁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2006년~2016년 부과된) 4만 6천 건의 범칙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된 지방의회 세 곳은 자신들의 위탁 계약은 모나쉬와 킹스턴의 외주 계약과 달랐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오늘 지방의회 세 곳의 주차위반 범칙금 검토 외주 위탁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하면서 문제의 지방의회 세 곳이 범칙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와 시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글렌 에이라 지방의회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외부 기관에 범칙금 관련 의사결정을 위탁했다.

- ▶ 포트 필립 지방의회와 스톤링턴 지방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외부 위탁기관이 제출한 의견에 사실상 그저 승인도장을 찍어주기만 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법적인 문제들은 법원에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들의 행동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내가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의견을 말하자면 문제의 지방의회 세 곳이 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위탁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범칙금 관련 결정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포트필립 지방의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외주위탁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속도로 보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공무원 한 명이 107 건의 검토 안전을 승인하는 데 단 1분만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토 안전 하나에 0.5초가 걸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증거에 기반 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또한 문제의 지방의회 세 곳이 내부 검토와 관련된 판단을 누가 하였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들은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공무원의 알아볼 수 없는 서명만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2016년과 2017년 법률자문을 받은 이후 지방의회들은 내부 관행을 바꾸고 범칙금 부과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옴부즈만이 밝혔다. 또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조사 결과 책임성 및 투명성과 관련하여 일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 ‘지난 10년 넘게 최소 5곳의 지방의회가 주차위반 범칙금의 내부 검토를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이들 중 두 곳은 관련된 법적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환급했다. 다른 세 곳은 결정권자의 신분이 감춰진 검토 서한 상의 일괄 서명을 근거로 자신들의 관행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세 곳의 지방의회가 법적

자문을 구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문제의 지방의회 세 곳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불분명해서 변호사들조차도 그 요구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옴부즈만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선의의 표시로 문제의 범칙금을 운전자들에게 환급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 이들 지방의회들은 2006년 법 개정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주위탁업체가 검토하고 승인한 범칙금 건의 환급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제출했다.
  - ▶ 포트필립에서는 8만 7천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880만 달러(약 108억 원) 상당의 문제의 범칙금을 납부했다.
  - ▶ 스톨링턴에서는 8만 1천명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문제의 범칙금을 납부했고 그 금액은 약 690만 달러(약 84억 원)에 달한다.
  - ▶ 글렌 에이라에서 문제의 범칙금을 납부한 운전자는 3만 6천명으로, 그 금액은 367만 달러(약 45억 원) 상당이다.

※ 출처: IOI “AUSTRALIA :Thousands of parking fines to be refunded as Ombudsman finds three Councils acted ‘contrary to law’” (IOI 홈페이지>News, 2020.2.25.)

**영국: 지방의회에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청년학생들을 위한 교통정책 촉구**

(IOI, 2020.2.26)

*이스트 서섹스 사회복지 옴부즈만은 청년학생들의 통학 교통편 제공을 거부한 지방의회에 통학 교통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스트 서섹스 카운티 지역 한 가정의 상황에 대한 지방의회의 대처를 지방정부와 사회복지 옴부즈만이 비판한 이후 이스트 서섹스 지방의회가 특별한 교육적 필요나 장애가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통학 교통정책을 재검토할 것이 촉구됐다.
- 해당 가족은 대학생 아들의 교육·건강·의료 계획에 명시된 대학에 통학할 교통편의 주 5일 제공을 지방의회가 거부하면서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 중증 학습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아들이 대학 진학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때 나이는 19세였다. 지방의회는 학생에게 주 4일 교통편만 제공하겠다고 말했고, 학생의 부모가 5일차에 학생의 등하교를 책임졌지만 부모의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아들의 5일차 통학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의회의 결정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의회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학생의 통학 교통편 제공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학생의 통학 교통편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의회의 결정에 제기하는 모든 진정이 잘못된 정책에 근거하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이클 킹(Michael King)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통학시킬 법적 의무가 있지만 대학생의 통학도 부모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들은 부모가 직접

운전해서 자녀의 대학교 통학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법에 따라 지방의회들은 19세 이상의 학생에게 무료 통학 교통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정책의 출발점 자체가 학생 가족이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
- ‘이는 해당 지방의회가 주 5일 통학 교통편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민원인 가족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이스트 서섹스 지방의회가 옴부즈만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성인 학생에 대한 교통편 제공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의 역할은 부당함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지방의회가 민원인 가족에게 사과하고 의회의 결정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300파운드(약 45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
- 옴부즈만은 전 국민을 위해 절차 개선에 대한 권고안 제시 권한이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지방의회는 학교의 이름을 명시한 교육·건강·치료 계획을 제공받은 청년학생들(19~25세) 중 2018년~2019년에 통학 교통편 제공에 대한 진정이 거부된 학생들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이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또한 이스트 서섹스 지방의회는 16세 이상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나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정책을 개정하고 법에 명시된 시험 및 어린이, 16~18세의 학생, 19세 이상의 학생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UK: Council asked to revise transport policy for adult learner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OI 홈페이지>News, 2020.2.26.)

**국제: 코로나19 누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가** (IOI, 2020.3.26)

*UN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약자인 장애인이 방치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카탈리나 데반다스(Catalina Devandas) UN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늘 장애인의 상당수가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내와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 데반다스 특별보고관은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 등 봉쇄 조치는 식사나 옷 입기, 목욕 등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 일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각국 정부는 이번 위기 동안 안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회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특별보고관은 장애인들의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특별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과 간병인들 역시 이번 위기 동안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특별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 특별 보고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큰 빈곤의 위험에 맞닥뜨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해 온 서비스가 현재 중단되었고,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비축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집으로 생필품을 배달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요양시설이나 정신병동, 교정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상황은 높은 감염 위험과 외부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특히 더 심각하며, 치료 목적으로 비상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심각성이 증가된다.
- 특별보고관은 ‘제한 조치는 좁은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공공 보건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입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설 수용 장애인들이 가족과 친지를 접촉할 수 없게 되면 이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치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각국 정부는 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특별보고관은 장애인들 역시 자신들의 생존이 국가의 우선순위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의료 재원이 부족하고, 위급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팬데믹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과 억제책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적 홍보 캠페인이나 보건당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수화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자막, 중계, 문자 메시지, 가독성이 높고 쉬운 언어 등 다양한 접근 방식과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특별보고관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리스 크루즈(Alice Cruz) UN 한센병 인권 특별보고관과 로사 콘펠트-매트(Rosa Kornfeld-Matte) UN 노인인권향유 독립전문관이 데반다스 특별보고관의 촉구를 지지하고 있다.

※ 출처: WORLD : City of Toronto improves how it handles dangerous dogs (IOI 홈페이지>News, 2020.3.26.)

**핀란드 : 소비자 옴부즈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 광고에 경고** (YLE, 2020.3.30)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악용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응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 옴부즈만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미심쩍은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기업 행태를 중지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카트리 바나넨(Katri Vaananen) 소비자 옴부즈만은 지난 월요일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다수의 EU 소비자 당국들이 판매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핀란드와 그 외 지역의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소위 ‘기적의 상품’이라는 것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 및 조작된 광고를 근절하는 데 협조할 것을 대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핀란드의 경매 사이트 Tori.fi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들은 이미 잘못된 코로나19 관련 광고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 또한 바나넨 옴부즈만은 부당한 판매 관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상기시키며,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공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핀란드 중앙수사국과 인터폴은 말도 안 되는 효과가 있다며 손소독제와 위생용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하려고 했던 사기꾼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 출처: FINLAND : Consumer Ombudsman warns against false coronavirus-related advertising (YLE, 2020.3.30)